

# 전기차 개인 충전기 수익화 '힘로'

### 중기부,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심사 돌입 관련 법령·조항 신설 필요... 정부 설득 관건

지난 4일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2차 우선협약 대상에 선정된 제주도 전기충전서비스 특구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실증 특례 사항 중에는 개인 소유의 충전기를 공유하고 합법적으로 수익화 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시 용산구 인근 모처에서 중기부 분과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앞서 20일에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5일에는 제주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수렴을 거쳤다.

전기충전서비스 특구 계획안을 살펴보면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 공간 최소화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

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자동차 진단 서비스 등 크게 4가지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계획으로는 2가지의 실증특례를 고민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전기차충전기에 배터리를 장착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과 한정(200kVA)된 전기차 충전 정격 용량을 고용량(400kVA) 등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 방식은 각각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부 설득이 관건이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 충전기의 공유 및 수익화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수익화를 허용하

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특례는 개인 소유의 충전기를 활용하는 수익화 모델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해 규제 해소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밖에 배터리 충전 후 유통적 충전기 활용을 위해 전력망에서 분리돼 전기차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충전기 안전인증 취득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달라져야 한다.

특구 심사는 10월 중 특구지정신청서 제출과 관계부처 규제 통과, 핵심규제 쟁점 조정회의 등이 열린 후, 11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지금의 전기차 충전기는 '제품'으로 보고 있어 인증이 필요한 구조인데, 이를 '설비'로 바뀌면 검사의 개념으로 변화돼 다양한 충전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며 "충전 사업자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업서 만들기 체험 28일 제주시 우당도서관에서 열린 2019제주독서문화대전에서 어린이들이 업서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도 산하 위원회 255개... 전국서 가장 많다

### 회의없는 위원회 14.1% 달해 신설·폐지속 69개나 늘어나

조례와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 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중 회의를 1년에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자치

단체 산하 위원회는 총 2955개로 2016년보다 14.5%, 375개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는 2016년 403개에서 2017년 423개, 2018년 522개로 2016년 대비 2018년 39.5% 증가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2016년 15.6%, 2017년 15.5%, 2018년 17.7%였다.

지난해 지역별로 위원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255개의 제주였고, 경기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 서울 203개 순으로 많았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울산이 27.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경남 24.7%, 대전 24.1%, 강원 23.3%, 경기 21.0%

% 순이었다. 제주지역은 14.1%로 서울(6.4%), 전북(10.0%), 전남(11.5%)에 이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폐지된 위원회 수는 160개이지만 신설된 위원회 수는 577개로, 3.6배에 해당한다. (417개 순증)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제주 69개, 서울 50개, 인천 29개, 광주 25개 순이었다.

제주지역의 위원회는 2014년 170개이던 것이 2015년 176개, 2016년 217개, 2017년 237개, 2018년 255개로 파악됐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 오영훈 "해경 해상무전기 도청·보안에 무방비" 지적



바다의 합선업무에서 사용되는 해양경찰청의 해상무전기(위키토기·항모통신기)가 도청·보안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정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방식의 해상무전기 1269대 전량이 도청·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1998년 무전기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 22년 동안 1269대의 '아날로그 방식 해상무전기'를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해 도청이 쉽다.

오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디지털무전기) 교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김태석 제주도의장이 지난 27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하이시위원회 주요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도의회-상하이시위원회 "상시 협력 확대"

### 김태석 의장 등 현지 방문

제주도의회는 지난 27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하이시위원회를 방문해 양 기관간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시스템 확대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주도의회와 상하이시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 7일 공식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만남에는 김태석 의장을 비롯해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박호형(문화

관광체육위원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상하이시측에서는 동원후주석과 패오희 비서장 등 상하이시위원회 주요 관계자가 함께 했다.

김태석 의장은 "양 기관간 상호교류의 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상호 지역별 특화된 부분에 대한 해당 위원회 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간차원의 문화 교류 기회 필요성 등도 강조하며 함께 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이시위원회 측은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도 성과평과 '양호' 도민만족도 '미흡'

### 도의회 의정활동 만족도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무조정실 성과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미흡' 등급의 벽을 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2018년도 제주도 정책과 사업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종합평점 84.5점을 받았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2점 상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2017년 86.5→2018년 94.0점) ▷민원서비스 처리 개선 실적(81.0→94.0) ▷환경영향

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84.0→99.0)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 실적(88.2→96.0) 등의 정책이 양호(80점 이상) 등급에서 우수(90점 이상) 등급으로 상향됐다. 반대로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실적(92.5→85.0) ▷관광진흥기금 활용 실적(90.8→89.4) ▷환경교육 시범도시 추진 실적(91.5→86.3) ▷제주 균형발전 추진 실적(91.0→86.5) 등의 정책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떨어졌다.

도민만족도의 경우 미흡(70점 미만)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48.5점으로 전년보다 5.1점 개선 실적(81.0→94.0) ▷환경영향

###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제동 도경관위 "스카이라인 조성을"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도주공 아파트 2·3단지를 14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스카이라인 조정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일렬로 늘어선 형태로 계획돼 장벽처럼 돼있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사업 부지가 경사가 있어 현재 2개 단으로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를 3단으로 검토할 것도 주문됐다.

오은지기자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81호

## [청정자원 확장품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 제주 확장품원료 산업화 협의체 회원사 모집 공고

**사업 목적** 확장품원료산업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협력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확장품원료 산업 발전 방안 모색

**모집 대상**

- 전국 확장품원료 소재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 확장품원료산업화지원센터 시설, 장비 이용 희망 기업 및 기관
- 청정자원 확장품 원료 산업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기관

**회원사 운영 지원**

- 확장품원료산업화지원센터 운영(시설·장비 구축 등)에 대한 회원사 의견 반영
- 원료 제품 개발(소재정보, 표준화/규격화 등 컨설팅) 지원
- 제주 확장품원료 인증 컨설팅 지원
- 협의체 내 네트워크 활성화(기술·정보 교류)
- 회원사의 현장인력 교육을 통한 설비 및 장비 사용 전문인력 양성
- 확장품원료 생산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9. 19(목) ~ 2019. 10. 25(금) 18:00까지
- 온라인 접수: 제주테크노파크(www.jejuip.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cosmetics@jejuip.or.kr)
- 오프라인 접수: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확장품사업팀 -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 기업지원동 305호

**문의**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정찬문 연구원  
☎ 064-720-2344, FAX: 064-720-2330, E-mail: coolmoon@jejuip.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jejuip.or.kr) 정보마당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산업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JTP 제주테크노파크**  
JEJU TECHNOPARK

제2회 韓·中·日 国际徐福文化祭

# 한·중·일 국제 서복문화제

문화제 행사

2019. 10. 5(토) ~ 6(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장소 : 서복공원

주최/주관 : 사단법인 제주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

후원 : **그리브** 제주특별자치도

- 볼로초 관련 제품 전시
- 공연
- 홍보물
- 캐릭터 디자인
- 포토존
- 스토리북

(사)제주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  
우 6359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13 서복전사관 내  
전화번호 064)763-0144 팩스번호 064)763-0146